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425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19년 2월 1일
-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2. 제안이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6.2.3.)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우리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 목적, 공공디자인의 정의 등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1) 기본목표, 추진방향,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5년 단위 수립(안 제5조)
-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안 제6조)

(3) 주민참여 규정 마련(안 제7조)

다.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기능
(안 제8조)

-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설치

(2)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공동위원장 (민, 관) 2명, 부위원장 2명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

(3)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4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관련 분야별 위원 10명을 지정하여 지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5)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규정(안 제15조)

라. 제4장 공공디자인 심의

- 심의신청 시기 및 심의 절차 규정(안 제20조부터 안 제21조)

마. 제5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1)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및 전담부서 설치 관련 규정
(안 제22조부터 안 제23조)

(2)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안 제24조)

-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제안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사업 시행 여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시범·공모사업 추진 및 우수공공디자인 인증관련 규정 마련
(안 제26조부터 안 제27조)

바.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에 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입법예고(2018. 11. 1. ~ 11. 21.)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5. 검토의견

□ 조례안 제정 추진경위

- 동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6047호)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2019년 2월 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2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그동안 “공공디자인”은 학계 및 업계에서 통일적으로 확정된 정의가 없는 바이며, 일반적으로는 “공공장소의 여러 장비·장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미는 일¹⁾”이라고 통용되어 왔음.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은 공공디자인을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디자인을 “매체” 중심으로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사전구상 작업을 ‘행위(문화적 패러다임)’로, 공간·시설·물품과 같은 ‘결과물(산업적 패러다임)’로 구분함과 동시에 사업의 “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임²⁾

당시 동법을 심사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이미지 개선과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법 제정은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음.

- 한편 서울특별시는 2006년 7월 19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도시디자인”의 정의를 “서울특별시 도시공간의 보전·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시설물의 배치·형태·운곽·색채 등을 디자인하는 행위”로 규정

1) 오창섭(2007), 「디자인의 사회적 기능과 공공디자인」, 한국디자인학회
김소라(2009), 「공공미술과 공공디자인, 그리고 도시」, 대한건축학회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등

2) 2015년 1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안」을 심사하면서 공공디자인의 주체를 민간까지 포함할 경우 산업디자인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한정하였음.

하고 있음.

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의 정의와 일부 통용되는 부분이 있으며 2015년 1월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신설 이후, 상기 조례의 소관을 도시공간개선단이 담당하면서 “도시디자인”을 사실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공공디자인” 개념으로 상정하고 공공디자인팀을 개설해 ① 공공디자인 계획·심의, ② 서울시표준디자인 개발, ③ 유니버설디자인 계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한편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서울시의 디자인과 관련된 정책수립 및 개발 등을 수행 중에 있으며, 2017년 9월 28일 디자인산업 육성, 공공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 시민참여 디자인 거버넌스 관련 계획을 골자로 한 <디자인정책 4개년계획>을 수립 하였음.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공공디자인의 업무체계가 도시공간개선단과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로 이원화되어 업무 중복과 비효율이 있다고 판단하고, 2017년 11월 8일 이를 일원화하는 정비방안을 검토 하여 2018년 1월까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 하고 정원을 재배치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는 2018년 8월 30일 완료³⁾되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소관이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로 변경되었으며, 동 조례안도 문화 본부에서 제정하게 되었음.

3)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8년 8월 30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디자인정책과 업무 분장에 공공시설물 관련 조항이 삽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공간개선단 소속 공공디자인팀(5명)이 디자인정책과 공공디자인관리팀(신설)으로 이관되었음.

공공디자인 업무체계 일원화 검토보고 ('17.11.8 조직담당관)

검토 의견 : 문화본부로 공공디자인 업무 일원화('18.1월~)

[공공디자인 업무 특성에 따른 검토]

- ① **(연계·확산 가능성)** 공공디자인 업무는 건축, 시설물 조성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포괄적 적용이 필요하므로 디자인 정책 수립 및 개발, 문화·예술 업무 담당하는 문화본부의 연계·확산성이 큼
- ② **(업무 적합성)** 공공디자인 업무는 심의·교육·컨설팅 등 일상적·지속적 성격이므로 프로젝트성, 하드웨어 중심의 도시공간개선단 보다 문화본부에 적합
- ③ **(중앙부처 연계성)** 공공디자인 업무의 주무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중앙부처와의 정책 연계 고려하여 문화본부가 적합

[기구 운영에 따른 검토]

- ① **(통솔범위)** 도시공간개선단은 통솔 범위가 넓어, 공공디자인 업무 일원화에 따른 관련 팀 및 정원 이관 시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됨
- ② **(업무 효율성)** 도시공간개선단은 주요 프로젝트 건축 공간 기획·설계 업무 등이 과중하므로 디자인 업무 분리 후 핵심 기능 중심으로 역량 집중 필요

-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는 도시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관리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5년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2016년 8월 <제3차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같은 해 12월 이를 심의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 위원회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

비전 :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

5대 추진전략 :

- ①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합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② 고령자, 장애인, 일반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 ③ 안내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 ④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⑤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 19개 핵심과제, 49개 세부과제 설정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기존 도시공간개선단의 신규 조례 제정을 위한 내역을 기초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안한 표준 조례안의 내용⁴⁾을 삼입해 동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시에서 수행하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을 모두 포괄하여 공공디자인의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디자인 분야 기본 및 상위 조례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조례안 체계

- 동 제정안은 총 29개의 조문과 6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례의 총칙(4개 조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3개 조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12개 조문), 공공디자인 심의(2개 조문),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및 공공디자인 진흥(8개 조문)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4)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안한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은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지역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조례안 주요 내용

연번	제목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주민참여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설치·기능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위원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내역 - 소위원회의 구성
제4장	공공디자인 심의	-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및 절차
제5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 절차 - 시범·공모사업 추진 및 관계기관 협조 -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부칙		

□ 조례안 조문별 검토

제1장 총칙

- 안 제1장 총칙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안 제2조(정의) “공공디자인”의 경우 “서울특별시,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물”을 “시 및 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여 공공이 주체가 되어 공공의 시설물에 디자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범위를 정하였음.

안 제2조제4항은 서울시에서 기존에 수행하던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을 공공디자인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데, 사회문제해결디자인 및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의 경우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담당⁵⁾하고 있으나, 범죄예방디자인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경우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상황임.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 안 제2장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가이드라인의 마련 및 주민참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안 제5조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것이며, 표준조례안은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5)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경우,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관할하고 있었으나 2018년 8월 30일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로 이관된 것임.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관련 근거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도지사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도 / ○○시·군·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가장 최근 수립된 〈제3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은 2016년(~2020년)에 만들어졌으며 안 부칙 제5조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의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되어 있음.

- 안 제6조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과 안 제22조의 사업 시행 원칙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서울시는 현재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따라 ‘서울도시디자인가이드라인⁶⁾’을 수립·시행 중이며, 가로환경 개선 사업, 광장조성사업, 교량 및 육교, 방음벽 설치 등 각종 사업의

6)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도시디자인의 대상을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로 구분하고 각 대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최근까지 3차례(2017.1. 최종)에 걸쳐 수정하였음.

기획 단계부터 공사 및 사후관리 단계까지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소, 공사, 공단 등 각 부서에서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변경 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동 조례안 제2장의 제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한 표준 조례안에 따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으로 설정되었으나, 안 제5조에 따른 계획명이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되어 있고, 동 조례안의 다른 장 제목은 “지역 공공디자인”이 아닌 “공공디자인”으로 명명되어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함.

수정안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장 <u>지역 공공디자인</u> 진흥계획 수립	제2장 <u>공공디자인</u> 진흥계획 수립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안 제3장은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진흥계획·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 공공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의 검토사항 준수여부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기구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그에 따르는 운영 규정을 마련한 것임.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2018년 10월 2일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에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 관련 위원회 신설 검토를 요청하였고,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은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사안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 조례 제정 이전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연간 운영 횟수가 14.1회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음.

- 안 제9조는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공동위원장(민, 관)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위원장 선임의 경우 시장이 위촉하는 1인(민간)과 서울시 문화본부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시 전체 위원회 중 공동위원장 체제 위원회는 12%(전체 206개 위원회 중 25개) 정도이며, 공공디자인 정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문화본부장이 관련 정책의 심의·의결과 연관되는 위원장의 직분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의 경우, 위원회의 위원장을 1인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2017.8)은 위원장 및 위원 직급 적정화를 위해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은 가급적 민간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추천자로 선임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안 제9조제1항은 위원회의 위원을 5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 부칙 제4조는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25명 이내)를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로 하고 있어, 동 조례안이 시행된 이후 문화본부 디자인 정책과는 현재 24명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에 대해서 신규 선임을 진행할 예정임.

안 제9조제3항은 위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위한 분야로 구성되었음.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안 제9조제3항제1호의 서울특별시의회의원 3명은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소관 상임 위원회 위원으로 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 제9조제3항제7호의 디자인정책과장은 문화본부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문화본부를 대표 하고 있고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서 예시를 통해 위원회 담당 부서의 과장을 간사로 제안하고 있으므로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하고 안 제14조제3항의 간사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안 제10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소 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안 제14조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을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원회 운영 사항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고려하여 위원회 전체의 의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수정안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u>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u> ----- ----- -----.</p> <p>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u>임명</u> 또는 <u>위촉하는 1명과 문화본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u> 하며, ----- -----.</p> <p>③ (생략)</p> <p>1. <u>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u></p> <p>2.~6. (생략)</p> <p>7. <u>문화본부장 및 디자인정책과장은 당연직</u> 위원이 된다.</p> <p>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간사를 두며,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장 또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둔다.</u>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u>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u>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u>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u>----- ----- -----.</p> <p>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u>위촉</u>하는 <u>민간전문가로</u> 하며, ----- -----.</p> <p>③ (제정안과 같음)</p> <p>1. <u>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3명</u></p> <p>2.~6. (제정안과 같음)</p> <p>7. <u>문화본부장은 당연직</u> 위원이 된다.</p> <p>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제정안과 같음)</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u>디자인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u>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u>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u>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p>

제4장 공공디자인 심의

- 안 제4장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한 시기와 심의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1조 및 제12조와 대부분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음.

다만 ① 기존 도시디자인 심의신청은 심의가 필요한 경우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공공디자인 심의신청은 기본구상 완료 단계에서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사전자문 절차가 삽입되었으며, ② 사전검토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류 및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 제21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가 두 차례로 한정되어 있어 사전절차 강화를 통한 심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공공디자인 심의절차(안 제21조) 요약

1.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 기본설계 완료 이전 신청
-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디자인정책과)의 사전 자문 이행

2. 공공디자인 심의 개최

-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
- 사전검토에 따른 서류 및 내용 보완의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위원회 개최 시기에서 제외

3. 재심의 신청

-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심의 신청
- 재심이는 두 차례에 한정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개최

제5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 안 제5장은 안 제2조에서 정의한 공공디자인사업⁷⁾ 추진의 원칙과 공공디자인 진흥에 필요한 전담부서, 시범·공모사업 추진, 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과 관련된 규정으로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서울시의 상황에 맞게 규정한 것임.
- 안 제22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는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 제13조의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협력체계의 구축으로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것과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을 추가적으로 삽입하였음.

안 제22조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의 원칙

「공공디자인 진흥 표준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p>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도/○○시·군·구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p>제22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것 2. 연령,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롭고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4.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할 것 5.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쉽도록 할 것 6. 공공디자인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시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할 것

7) 안 제2조제2호 :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시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 안 제24조는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따른 공공디자인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히 서울시의 주관이 아닌 구청장, 공공기관 등의 장 또는 시민이 공공디자인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에 대해 자세한 절차를 마련하였음.

안 제24조제7항은 제안을 받아 공공디자인사업이 실행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이를 지방보조금⁸⁾으로 한정하고 있음. 물론 이 경우 자치구 및 시민에게는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자본·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경상사업보조 등이 지급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출연금 등이 보조되는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해당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중 하나인 서울디자인재단의 고유사업 발굴 필요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서울시 문화본부에 제기한 바, 서울디자인재단이 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의 추진에 한계⁹⁾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음.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이러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에 동의하였으며, 안 제24조제7항, 제8항 및 제9항을 포함해 안 제8조제7항의 ‘지방보조금’은 ‘사업비’로 포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8)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안 제24조의 공공디자인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사업비’로 폭넓게 제시하였으나 2018년 11월 서울시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평가에 따라 사업 지원금의 결산 확인 등이 곤란하거나 지원받은 자의 책임성 확보 곤란,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체적 정산 절차 마련 및 환수 조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사업비 지원을 지방보조금으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음. 지방보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 집행, 정산, 반환 등의 세부사항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장점이 있음.

9) 안 제24조제7항을 ‘지방보조금’으로 한정할 경우,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대형 사업 추진은 가능하나(민간자본·경상사업보조), 서울디자인재단의 고유사업으로 출연금을 보조할 수는 없음.

수정안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u>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6. (생략)</p> <p>7. 제24조제7항에 따른 <u>지방보조금</u> 지원에 관한 사항</p> <p>8.~12. (생략)</p> <p>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사업) ① ~ ⑥ (생략)</p> <p>⑦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시행기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u></p> <p>⑧ 제7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반환 등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에 따른다.</p> <p>⑨ 제7항에 따라 <u>지방보조금을</u> 지원받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u>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6. (제정안과 같음)</p> <p>7. 제24조제7항에 따른 <u>사업비</u> 지원에 관한 사항</p> <p>8.~12. (제정안과 같음)</p> <p>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사업) ① ~ ⑥ (제정안과 같음)</p> <p>⑦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제안을 받아 공공디자인사업을 시행토록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u>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u></p> <p>〈삭 제〉</p> <p>⑧ 제7항에 따라 <u>사업비를</u> 지원받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p>

부칙

- 안 부칙은 시행일을 포함해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폐지 및 기본계획·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안 부칙 제6조는 동 조례안과 관련된 다른 조례의 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조제3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조례」 개정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폐지 및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변경해야 할 일부 조문이 누락되었음.

특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조례」 제7조 제3호 및 제8조제1항 중 폐지될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관련 조문을 추가로 수정하고, 제14조제1항의 “행정2부시장”은 해당 조례가 2018년 8월 30일자로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디자인정책과로 변경되었으므로 “행정1부시장”으로 수정하여야 함.

수정안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부 칙	부 칙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제7조제3호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제5호에 따른 심의대상”을</u> <u>“「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의 시설물 및 디자인 사</u>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의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p> <p>제13조제3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p>	<p><u>업”으로 한다.</u></p> <p><u>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로 한다.</u></p> <p>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의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p> <p>제13조제3항제1호 중 “도시디자인위원회”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p> <p><u>제14조제1항 중 “행정2부시장”을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u></p>

〈붙임 1〉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위원회 명단

연번	분야	성명	성별	소속	비고
1	공간디자인	길윤정	여	(주)지아이엘디자인 대표	
2	공간디자인	우성호	남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3	공간디자인	권현정	여	아키에듀 건축연구소 대표	
4	공간디자인	김주연	남	홍익대학교 교수	
5	공간디자인	백현아	여	비앤제이 건축사사무소 대표	
6	산업디자인	조남주	여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	
7	산업디자인	고영균	남	(주)아이디하우스 대표	
8	산업디자인	민영삼	남	더디엔에이 대표이사	
9	색채	김경인	여	(주)브이아이랜드 대표이사	
10	색채	백진경	여	인제대학교 교수	
11	시각디자인	조현미	여	백석예술대학교 교수	
12	유니버설디자인	이상곤	남	(주)아이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13	유니버설디자인	최성호	남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14	건축디자인	김정임	여	(주)서로아키텍츠 대표	
15	건축디자인	김주경	남	(주)오우재건축사사무소 대표	
16	건축디자인	원형준	남	(주)범도시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17	경관(환경)디자인	이희정	남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18	경관(환경)디자인	홍승대	남	신안산대학교 교수	
19	조경	주미옥	여	아이비전 대표	
20	조경	황용득	남	기술사무소 동인조경미당 대표	
21	시의원	박기재	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2	시의원	김춘례	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3	시의원	김소영	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4	당연직	박숙희	여	디자인정책과장	

〈붙임2〉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별표1〕,〔별표2〕

[별표 1¹⁾]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²⁾(제8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 대상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등이 공공성과 기능성,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기반시설

분류	시설물의 종류
도로시설물 (도로 부속시설물 포함)	가. 교량(철교를 포함한다) 나. 고가차도(철도위에 설치한 고가차도를 포함한다) 다. 입체교차 라. 자전거도로 마. 보도포장, 보도·점자블록 바. 보도육교, 지하보도(승강기를 포함한다) 사. 20M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석축 및 옹벽(터널전면부 옹벽시설 포함) 아. 방음벽 자.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낙석방지망 등 차. 가로등 카. 트렌치, 맨홀 타. 제설시설
도시 철도 시설	가. 지하철출입구(캐노피를 포함한다. 단, 교통약자 등을 위해 기존 출입구를 개량(개선)하는 경우와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나. 지하철안내표지판 다. 환기구(흡·배기구) 라. 지상노출 엘리베이터
하천 시설물	가. 육갑문 나. 하천 제외지 구조물(옹벽, 석축 등)
전원설비	가. 송전탑, 변압탑
자전거 이용시설	가. 자전거보관대 등

2. 기타 시설물

분류	시설물의 종류
전기통신설비	분전함, 공중전화부스, 무선전화기국, 발신전용휴대전화 기지국, 우체통, 통신안테나, CCTV 지주, 전신주, 신호등주
정보통신망	가. 종합유선 방송 나. 교통량검지기
문화관광시설	가. 관광안내소 나. 관광안내도 다. 시티투어 안내표지판, 문화재 설명 표지판, 기념 표석
가로녹지시설	가. 가로수 보호덮개 나. 가로 녹지대 다. 가로 화분대 라. 분수대 마. 벽천
환경관리시설	가. 휴지통 나. 환경미화원 대기소 다. 공중화장실 라. 대기오염 전광판
교통관련시설	가. 보행자 안내표지 나. 택시·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공항버스 승차대 다. 정류소 라. 택시 표지판 마. 주차장 안내표지판 및 주차요금 표지판 바. 주차장 관리소(박스형) 사. 부설주차장 진·출입표지 아.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자. 교통 감시시설 차. 블라드, 보호펜스 카. 횡단보도 쉼터
도로점용 허가시설물	가. 소화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사설안내표지·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버스카드 판매대·벤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라.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 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기 타	가. 택시, 마을버스, 시내버스 및 소방차 등의 관용차 나. 한강유람선, 수상택시 다. 광장 라. 공원(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위원회 심의대상 공원은 제외)

- 1) 단, 설계공모(「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발주방식) 및 일괄입찰·대안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따른 발주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발주방식] 방식으로 설계된 시설물은 제외
- 2) 단,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외

[별표 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대상 디자인 사업(제8조제1항 관련)

다음 각 호 관련 사업 등이 디자인 구현 가능성, 경제성, 효과성, 확산 가능성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검토

1.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인구변화	고령화, 저출산,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차별해소	성별, 인종, 장애유무 등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디자인
안전안심	범죄,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안전과 심리적 안심을 제공하는 디자인
심신건강	소외, 고립,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건강과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하는 디자인
생활개선	공중위생, 층간소음, 인지환경 개선 등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디자인
행정편의	공공행정의 편의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디자인
제도개선	사회복지 제도와 시스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디자인
기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디자인

2.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범죄예방, 재난대피 등을 돕는 사인, 영상 등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자연감시, 접근통제, 영역성 강화 등을 위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안전한 보행로 및 안전거점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생활안심 디자인
프로그램	지역안전 및 커뮤니티 강화를 위한 지속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분 류	세 부 항 목
정보매체	정보 접근성 및 길 찾기에 대한 차별이 없는 다양한 정보매체 디자인
시설물	다양한 시민의 행태와 사용상 편리성과 안전성을 반영한 시설물 디자인
공 간	다양한 시민의 접근성, 이동 연계성 및 편의성이 있는 공간 디자인
지 역	지역단위의 종합적인 유니버설디자인
프로그램	유니버설디자인 인식개선 및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문화행사 등 프로그램